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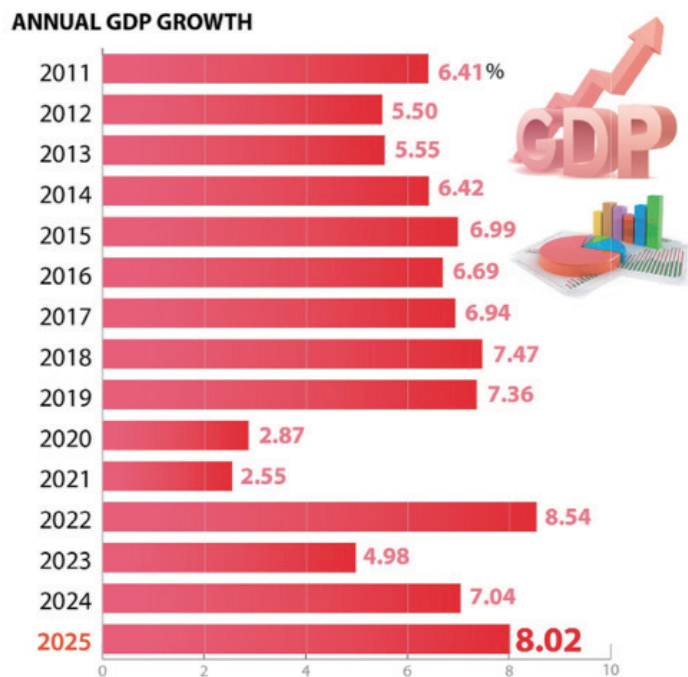
Chip-to-Ship: 도이모이 2.0으로 첨단산업 기치 올리는 베트남

세계 15위 무역국 베트남의 고민

작년 한 해 베트남의 경제 성적표는 화려했다. 8.02%라는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2022년 8.54% 다음)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5,140억 달러를 달성해 처음으로 상위 중간소득국(세계 32위)에 진입했다. 수출입 총액도 9,300억 달러를 넘으며 세계 15위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수출의 73%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담당한다. 일례로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 ICT 산업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0위권 내에 있지만 정작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체로 조립 · 포장 · 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GDP 성장률 추이(2011~2025)



출처: 베트남 통계청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베트남 지도부 안에서도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4년 8월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에 오른 토람(Tô Lâm)은 당 간부 회의에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의 최하단에서 외국 기업이 아웃소싱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ISEAS, '26.1.10, “Vietnam’s New Industrial Policy under Tô Lâm”). 세계은행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2025년 발간한 “Viet Nam 2045: Breaking Through”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베트남은 민간기업 성장을 위한 국가개혁, 즉 또 한번의 ‘도이모이 2.0’(Doi Moi,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이모이 2.0’: 1986년과 무엇이 다른가

1986년 시행된 ‘도이모이 1.0’은 당시 붕괴 직전의 베트남 경제를 구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소련식 계획경제 실패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사유재산권 인정, 시장가격 도입, 외자유치 확대라는 경제 체제전환을 단행했다. 그 이후 30년 간 FDI에 힘입어 연평균 6~7%대 성장을 이어가며 베트남은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도이모이 2.0’은 과거의 성공모델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FD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기업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혁신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다.

도이모이 1.0과 2.0 비교

구분	도이모이 1.0 (1986~)	도이모이 2.0 (2025~)
추진배경	소련식 계획경제 실패, 식량난	중진국 함정, FDI 의존 성장 극복
핵심목표	중앙계획 → 시장경제 도입	FDI 조립기지 → 기술혁신 주도
정부역할	규제 완화, 외자유치 창구	적극적 산업정책, 대표기업 육성
성장동력	농업개방, FDI, 제조업 수출	반도체, AI, 원전, 민간 기업
제도수단	사유재산권, WTO 가입 등	정부개혁, 4대 기둥 결의 등
추진속도	점진적 (10년 이상)	급진적 (6개월 내 핵심 제도 완성)

‘도이모이 2.0’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걸쳐 속도감있게 구축됐다. 또렷이 ‘4대 기둥 결의’(Four Pillar Resolution)라고 지칭한 과학기술혁신(결의 57호), 국제통합(결의 59호), 법제개혁(결의 66호), 민간주도성장(결의 68호)에 더해 행정구역개편(결의 60호)과 반도체국가전략(총리령 1018호), 디지털기술산업법, 원자력법 개정 등이 ‘도이모이 2.0’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틀이다.

도이모이 2.0 관련 주요 법·제도

구분	분류	주요내용
결의 57 -NQ/TW (’24.12.22)	과학기술 혁신	-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경제 핵심으로 지정 - AI·반도체 투자 우선순위화 - Triple Helix(정부-기업-대학 협력 모델) 제도화 등
결의 59 -NQ/TW (’25.1.24)	대외정책	- 글로벌 통합 심화를 통한 경제 성장 - 미국과의 FTA 추진 및 공급망 다각화
결의 60 -NQ/TW (’25.4.12)	행정구역 개편	- 63개 성(省)·시(市) → 34개로 통합, 현(縣) 폐지 - 4단계 지방행정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 - 6대 경제권역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결의 66 -NQ/TW (’25.4.30)	법제개혁	-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인허가 절차 30% 철폐 - 2028년까지 ASEAN 3대 투자처 목표
결의 68 -NQ/TW (’25.5.4)	민간주도 성장	- 민간기업을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법제화 - 국가대표 챔피언 기업 육성 - 수익계약, 무이자 장기대출 허용
총리령 1018 QD-TTg (’24.9.21)	반도체 전략	- C=SET+1 기반 2030, 2040, 2050 반도체 로드맵
디지털기술 산업법 (’26.1.1 발효)	디지털, 반도체, AI 전략	-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5% CIT 37년 적용 - 최초 6년 법인세 면제 + 13년 50% 감면 - 반도체·AI·디지털 예산 36억 달러 편성
원자력법 개정 (’26.1.1 발효)	원자력	- 원자력을 국가 전략 우선 과제로 지정 - 차세대 첨단 원자로(SMR 등) 도입 근거 마련

베트남식 DOGE: 공공 슬림화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베트남의 행정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 국가 예산의 약 70%가 방대한 관료조직 유지를 위한 경상 지출(인건비, 청사 운영비 등)에 소진되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쓸 재원이 부족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저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재원부족과 의사결정 지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행정개혁의 실질적 목적이었다.

2025년 7월 1일 베트남은 63개의 성(省)·시(市)를 34개로 통합하고, 현(縣) 단위를 폐지해 기존의 4단계 지방행정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공무원 25만 명을 구조조정하고 중앙부처는 18개에서 14개로 줄였다. 니케이(Nikkei)가 “베트남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인 DOGE를 앞질렀다”고 평가할 정도로 규모와 속도면에서 이례적이었다(Nikkei Asia, '25.4.4, Vietnam trumps DOGE with urgent state restructuring). 2030년까지 절감되는 행정 비용은 약 7.2억 달러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원자력·이공계 인재 투자로 흘러가는 구조다. 동시에 지방행정 통합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 규제와 행정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결의 60’이 공공부문 슬림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결의 68’은 민간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조치다. ‘결의 68’은 민간 기업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동력’이라고 명문화하고,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수의계약과 무이자 장기대출을 보장한다. 즉,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투자 리스크를 낮춰주면 민간기업이 그 위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실제로 ‘결의 68’이 발표된 지 이틀 후 베트남 최대 기업집단인 빈그룹(Vingroup)은 70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투자를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부터 철강·철도·조선·해운 등 인프라 산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된 국가대표 챔피언 기업, 이른바 ‘Chip-to-Ship’ 기업(Reuters, '25.11.4, Vietnam's push for 'chip-to-ship' conglomerates raises red flags)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C=SET+1: 베트남의 반도체 성장 전략

미국 반도체 수입 물량의 약 25%는 베트남을 통해 들어온다. 하지만 그 실체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최종 패키징하는 것으로 베트남은 여전히 조립·테스트·패키징(ATP: Assembly, Testing, Packaging) 기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치민의 인텔(Intel) 공장(인텔의 글로벌 최대 규모 생산시설), 박닌(Bac Ninh)의 암코(Amkor) 공장, 박장(Bac Giang)의 하나마이크론 공장 등이 주요 ATP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반도체 부문 외국인 투자 건수는 170개, 금액은 116억 달러에 이르지만,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설계와 제조 부문이 전체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가져간다. 즉, 베트남은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과 공정기술은 여전히 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반도체 전략 로드맵

구분	1단계 (2024-2030)	2단계 (2030-2040)	3단계 (2040-2050)
IC설계사	100개	200개	300개
반도체팩	1개 (소규모, 32나노 착공)	2개	3개
OSAT공장	10개	15개	20개
반도체산업 매출	250억 달러/년	500억 달러/년	1,000억 달러/년
전자산업 매출	2,250억 달러/년	4,850억 달러/년	10,450억 달러/년
엔지니어	5만 명	10만 명	15만 명
부가가치율	10~15%	15~20%	20~25%
핵심이정표	2027년 국내 ATP 생태계 완결	FDI 유치와 자립화 병행	글로벌 R&D 선도그룹 진입

이러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2024년 9월 ‘총리령 1018호’로 공식화됐다. 핵심은 ‘C=SET+1’으로 요약할 수 있다. C(Chip)은 반도체 자립, S(Specialization)는 AI 특화, E(Electronics)는 전자산업 고도화, T(Talent)는 인재 육성, +1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전한 대안을 의미한다. 이후 ‘결의 57’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반도체 산업 발전 로드맵이 제시됐다. 설계역량 구축 → 제조기술 내재화 → R&D 선도라는 3단계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기업·대학을 잇는 Triple Helix 협력 모델을 제도화해 반도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베트남의 대표 ICT 기업인 비엠텔(Viettel)과 FPT에게는 반도체 기술자립이라는 국가 미션이 부여됐다.

실제로 전략은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1월 비엠텔은 화락(Hoa Lac) 하이테크파크에 베트남 최초의 반도체 팹을 착공했다. 32나노 반도체로 아직은 출발 단계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내수용 ‘미들테크’ 시장을 우선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말 시험생산, 2030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같은 달 FPT도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공장을 착공했다. 기존 ATP 경험에서 쌓은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화된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됐다. 디지털기술산업법이 발효되면서 2.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5%가 37년간 적용되며, 최초 6년은 100% 면제, 그 다음 13년은 50% 감면이 주어진다. 또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베트남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제2의 고향’이라고 될 것이라고 선언한 후(Bloomberg, '23.12.11, Nvidia Sees Vietnam as potential second home), 4년 간 45억 달러 투자와, 4,000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한 것도 베트남의 반도체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기회: 베트남 산업전략이 여는 협력의 창

이처럼 베트남 ‘도이모이 2.0’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성은 명료하다. 다만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스스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인재·기술과 에너지다. 이 두 영역은 앞으로 한-베 경제협력의 핵심 접점이 될 수 있다.

첫째, 반도체 생태계 협력이다. 베트남은 현재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5,500명을 2030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10배 속도로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ATP(조립·테스트·패키징) 단계 숙련 인력과 반도체 설계·공정 엔지니어 사이의 질적 격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미 구축한 협력사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접점이 된다. 국내 장비·소재·부품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이 현지 대기업 공급망에 연계되어 진출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완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보하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시장 내 안정적 거점과 숙련 인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둘째, 에너지 협력이다.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정전에도 수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 대규모 전력이 필수다. 석탄 의존도가 높고 정전이 잦은 베트남의 현 전력 구조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 베트남 정부가 2025년 4월 14년간 유지해 온 무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이러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마침 2026년 1월 일본과의 닌투언 원전 2호기 협력이 종료되면서 한국의 APR-1400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고(예상 수주 규모 약 12.7조 원), 2025년 8월 팀코리아(한전·두산에너지빌리티·산업부)는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외국 기업 최초의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 수주는 단순 설비 공급에 그치지 않는다. 안정된 전력 위에서 한국산 반도체 장비·소재가 작동하고, 이를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운영하는 ‘에너지-전략산업 패키지’ 구조를 설계할 때 수주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장기 저리 차관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한 종합 패키지 구성이 수주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베트남의 급속한 산업 고도화 전략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 시장에 조기 진입해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 기술이 축적되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협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베트남의 성장 경로 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다. FKI